

道 건설공사 외지업체만 배불린다

올림픽 공사 막바지 발주 영향
올해 수주액 10조 달하는데
외지업체가 7조 가까이 독식
지역업체 몫 3분의 1도 안 돼

강원도에서 추진되는 건설사업이 외지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 도내 중소건설사는 경영난에 허덕이며 고사 위기에 몰렸다. 2011년 이후 도내 건설수주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공공·민간공사의 총 건설수주액은 9조6,790억원으로 올해는 더 늘어나 10조에 달할 전망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의 막바지 발주와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 개발사업 등의 영향이다.

도내 건설공사액 및 수주액(억원)

연도	강원지역 총 공사액	도내 업체 건설수주액
2011	6조9,480	2조5,560
2012	7조3,610	2조6,130
2013	8조520	2조7,170
2014	8조8,740	2조7,090
2015	9조6,790	3조860

정부 집계 결과 올해 1~10월 도내 일반건설업체 공사수주액은 4조6,15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5,716억원 대비 79.4%나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 일반건설업체의 수주액은 전체의 25.5%인 1조1,802억원에 불과했다. 2011~2015년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기성실적을 바탕으로

도내 업체 수주비율(%)



로 추정된 올해 1~10월 원도급과 하도급의 총 수주액은 9,700억원가량이 다. 종합과 전문을 포함한 전체 업종을 통틀어도 올해 도내 업체들의 수주액은 3조원에 못 미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강원지역 전체 건설사들의 몫이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5년간 전체 도내 건설공

사업 중 지역업체들이 수주한 비율은 최저 30.5%에 그친다. 외지업체들이 70% 가까이 독식하고 있다. 수년간 국제행사 유치와 개발호재로 대형 건설공사가 도내에서 진행됐지만 지역 건설사에는 별다른 혜택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외지·철새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 제한과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할·분리발주를 통해 공사금액을 낮추고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건전한 건설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발주처들이 지역업체 보호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석미건설 성금 기탁 석미건설(주)(회장: 심광일)은 지난 23일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0만원을 동해시에 기탁했다.

경비 지원하고, 시공까지 꼼꼼하게...

건협, '셉테드 사업'으로 범죄없는 거리 조성 빛났다

법질서 유공 포상 시상
환경개선 '대통령 표창'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지난 21일 경기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법무부 주관 2016년 법질서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한건설협회는 범죄예방설계(CPTED·셉테드)를 통해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법질서 유공 포상은 법질서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법무부가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셉테드는 건축물 설계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고, 공적인 장소임을 표시해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은 △밝은 거리 조성(낙서지우기, 벽화그리기) △주민주거시설 및 인근늘이더 정비 △우범지역 화장실 개선 등이다.

법무부의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14년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와 경찰은 대상



이충렬 대한건설협회 기획본부장이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지역 민원 해소와 실행계획 수립 지원을 맡았다.

셉테드 사업은 건설업체가 시공과 경비 지원에 나서면서 날개를 달았다. 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셉테드 사업비와 함께 직접 시공에도 나서 사업추진의 완성을 높였다. 2014년부터 전국 18곳에 30억원을 투입해 범죄예방에 앞장섰다.

2015년 사업은 지역별로 △서울 도화동(이화공영) △서울 공릉동(건설협회 서울특별시

회·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 대림동(금강주택) △대전 유천동(금성백조) △광주 월산동(건설협회 전남도화·광주시회, 남화토건 등) △대구 상인동(화성산업·서한·태왕·반석종합건설)에서 진행됐다.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및 건설단체는 사업을 맡아 자금을 내고 직접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시공을 맡아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2015년 사업 역시 건설업체의 지원으로 추진됐다. 건설단체에

서는 건설협회와 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공제조합이 참여했다. 건설사 가운데서는 대형건설사 참여가 두드러졌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이 지원에 나섰다.

셉테드 사업은 주변환경 개선에 따른 주민 만족도 향상과 범죄예방 효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법무부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셉테드 시행 지역주민 1611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만족도는 평균 11.5%포인트(56.4%→67.9%) 상승했다. 범죄안전 체감도 역시 평균 16.7%포인트(56.5%→73.2%) 뛰었다.

특히 서울 북부지역 주민들의 범죄안전 체감도는 무려 44.2%포인트 상승했고, 광주지역은 34.5%포인트 높아지기도 했다. 지역만족도는 천안이 27.3%포인트, 서울 북부지역은 18.4%포인트 올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법질서 확립 유공으로 8개 기관 및 개인이 각각 표창을 수상했다.

한상훈기자 newspia@

내년 상반기 재정 60%이상 푼다

당정, 민생현안 긴급 점검회의
2월전에 추경 편성 적극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첫 공식 회의인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소비 위축이 예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앞서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연 구조조정과 관련, 조세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에서 빠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를 내년 초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고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기준 소득을 17%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방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규제업종에 이발과 미용업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기업인적합업종 13개에 대한 지정 연장 방안, 1인 자영업자와 1인 제조업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을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당정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상승 압박, 13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송인석 제2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업률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사업 등의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재정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보조출연 사업은 최종 수요자에 대한 사업집행진도 등에 따라 관리하고, 공공요금이나 여비 등 조기 집행에 부적합한 사업이나 비목은 제외할 예정이다. 채희찬기자 chc@